

韓國의 輸出振興 貿易戰略에 관한 再考

南 宗 錄*

<目 次>

- I. 序 論
- II. 貿易戰略에 관한 再考
- III. 貿易, 產業政策 및 經濟的 成果 : 概觀(1954~86)
- IV. 貿易政策의 解剖
- V. 結 論

I. 序 論

1960년대 초에 한국이 對外指向的인 貿易戰略을 채택한 이래 급속한 經濟成長과 工業化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거둔 현저한 성공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공적인 成果가 경제발전기간의 대부분을 통하여 정부가 貿易 및 投資活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역할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인지, 혹은 그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국내외를 막론하고—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극히 최근까지도 소위 대외지향적 經濟에서 國內市場은 상당히 높은 보호를 받아왔으며, 정부는 1970년대에 이른 바 重化學工業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戰略的’ 산업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계획(package assistance progra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¹⁾ 따라서 한국에서는 매우 복잡한 貿易 및 產業誘引體制가 운용되어 왔다.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範疇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輸入代替, 輸出振興 그리고 (아마도 수입대체와 수출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特定產業의 育成을 위한 誘引政策이 그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삼십여년 동안 한국에서 운용되어 왔던 무역 및 산업의 주요한 유인책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產業發展은 물론 經濟發展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주요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 高麗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중화학공업에는 가령 일차금속, 석유화학, 전기 및 전자, 수송설비 등과 같은 산업이 포함된다.

II. 貿易戰略에 관한 再考

경제개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下部構造(*infrastructure*)를 갖추고 市場效率을 증진시키며 안정적인 巨視經濟政策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은 무역 및 산업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는 종종 의견을 달리하여 왔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政府介入의 형태는 代案的인(alternative) 무역전략을 구별하는 특징을 제공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무역전략을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대외지향적 무역전략과 대내지향적 무역전략이 그것이다. 前者는 결과적으로 볼 때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과, 수출을 위한 생산을 차별하지 않는 무역 및 산업유인책의 사용을 말한다. 이 전략은 국제무역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어느 정도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輸出振興戰略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와는 반대로 대내지향적 전략은 무역 및 산업유인책이 수출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이다. 이 접근은 輸入代替戰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내지향적 및 대외지향적 전략의 이론적인 근거는 이미 다른 곳에서 철저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²⁾ 간단히 말해서 대내지향의 論據는 ‘初期輸出悲觀論(the early export pessimism)’, ‘幼稚產業保護論’ 및 ‘最近輸出悲觀論(the recent export pessimism)’이라는 표제하에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수출비관론은 1차생산물의 생산자들이 만성적인 교역조건의 악화와 수출시장의 불안정성에 직면한다는 전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³⁾ 유치산업보호론은 어떤 산업들이 처음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는 또한 보상될 수 없는 편익이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부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일

(2) 예컨대 A.O. Krueger, “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in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edited by W. Hong and L.B. Krause, Seoul: KDI와 I.M.D. Little, *Economic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82를 참조하라.

(3) 교역조건의 문제에 관해서는 R. Prebisch, “Five Stage in My Thinking on Development,” in *Pioneers in Development*, edited by G.M. Meier and D. Se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J. Spraos, “The Statistical Debate on the Net Terms of Trade between Primary Commodities and Manufactures,” *Economic Journal*, Vol. 90, 1980; D.R. Sapsford, “The Statistical Debate on the Net Barter Terms of Trade between Primary Commodities and Manufactures: A Comment,” *Economic Journal*, Vol. 95, 1985를 참조하라. 그리고 수출의 불안정성에 관해서는 A.I. MacBean and T. Nguyen, “Export Instability and Growth” (a mimeo), 1987를 참조하라.

시적인 보호의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⁴⁾

마지막으로 흔히 ‘構成의 誤謬(the fallacy of composition)’라고도 불리우는 최근수출비관론은 만약 모든 발전도상국들이 수출진흥전략을 따른다면 선진국들은 그 결과로 증대하게 된 수출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외지향전략은 주로 特化(specialization) 및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자원을 가장 생산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相對價格變化의 역할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대외지향전략의 지지자들은 국제가격이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발전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에 대한 보조는 필요한 下部構造의 구축, 研究開發(R&D), 勞動訓練 및 기타의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교정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내지향론은 많은 나라에서 수시로 제기되었으며 다양한 強度(intensity)로 채택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진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어떤 나라의 1차상품의 수출증대가 비록 세계시장에서 그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2차산업부문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수입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상품별로 輸出稅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정책대응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또한 유치산업보호론이 실질적인 타당성을 갖는 한 어떤 종류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수입제한정책은 아마도 가장 좋은 형태의 지원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발전도상국의 공산품수출에 대항해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선진국에서의 新保護貿易主義는 발전도상국으로 하여금 대외지향적 전략을 여전히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심지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그들과 발전도상국 모두에 있어 교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만약 발전도상국들도 대외지향전략을 수정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戰後 경험을 토대로 한 많은 연구, 즉 리틀, 시토브스키 및 스코트(Little, Scitovsky and Scott 1970), 바그와티(Bhagwati 1978), 크루거(Krueger 1978)와 세계은행(World

(4) 유치산업보호론에 관해서는 R. Baldwin,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7, No. 3, May/June, 1969 및 A.O. Krueger and B. Tuncer, “An Empirical Tes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2, 1982를 참조하라.

(5) 최근수출비관론에 관해서는 O. Havrylyshyn, “Penetrating the Fallacy of Export Composition: Or Hobson’s ‘Second Falsehood’ Revisited,” a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a mimeo), 1987을 참조하라.

Bank 1987) 등을 포함한 연구들은 모두 대내지향보다는 대외지향하에서 성장, 고용 및 생산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World Bank의 보고(1987, p. 85)에 의하면 1953~73년 사이에 강력한 대외지향적 경제에서는 1인당 실질소득의 연평균성장률이 6.9%로 추정되었지만, 강력한 대내지향적 경제에서는 겨우 1.6%에 지나지 않았다. 1973~85년 사이에는 경제여전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외지향적 경제에서는 1인당 소득이 연평균 5.9% 증가한 반면에 강력한 대내지향적 경제의 경우 연평균 0.1% 감소하였다.

대외지향이 상대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설 중에는 예를 들어 대외지향하에서는 規模의 經濟와 보다 신축적인 政策調整에 기인하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대내지향하에서는 수입보호 및 행정상의 차원 낭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⁶⁾

따라서 이제 대내지향적 무역전략에 대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의 相對的 優越性은 이론 및 경험적 증거의 양 측면에서 확증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한 경제가 어떻게 대내지향으로부터 대외지향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문제를 지난 삼십 여년 간의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검토하는 데에 있다.

III. 貿易, 產業政策 및 經濟的 成果 : 概觀(1954~86)

<表 1>에는 1954~86년 기간에 걸쳐 전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54년에서 1986년 사이에 한국의 실질 GNP는 아홉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실질성장률도 6.9%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성장의 성과가 균등한 것은 아니었다. 후반 이십년간(1964~86) 실질 GNP는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며, 이는 終戰 直後의 시기인 십년간(1954~64) 연평균성장률이 4.7%였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 결과 1인당 실질소득은 1980년의 不變價格으로 측정할 때 1954년의 587달러에서 1964년에는 723달러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1986년에는 2,300달러가 되었다. 1954~64년 기간에는 약 2.5%였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74~86년에는 1.5%가 되었던 것도 1인당 GNP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한국의 인구는 1954년의 2,180만 명에서 1986년에는 4,1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6) Krueger, *op. cit.*, 1981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특히 상세한 내용과 예는 World Bank의 것을 참조하라.

〈表 1〉 主要經濟指標 : 1954~1986 (연평균성장률)

	1954	1964	1974	1986	1954~ 1964	1964~ 1974	1974~ 1986
1. 인구(백만명)	21.8	28.0	34.7	41.6	2.5	2.2	1.5
2. GNP(10원 억) ¹⁾	6,183	9,790	24,425	59,289	4.7	9.6	7.0
3. 1인당 GNP(천원) ¹⁾	284	349	704	1,468	2.1	7.3	5.8
1인당 GNP(미국달러) ¹⁾	587	723	1,463	2,300	—	—	—
4. 부문별 부가가치(GNP, %)							
1차산업	50.2	45.9	24.6	13.8	3.8	3.0	2.4
제조업	5.3	9.7	20.6	33.3	11.2	18.1	11.1
사회간접자본	44.4	44.4	54.8	52.9	4.7	11.9	6.8
5. 부문별 고용(/총노동력, %)							
1차산업	—	61.9	48.2	23.6	—	0.8	-2.7
제조업	—	8.8	17.8	25.9	—	10.8	5.1
사회간접자본	—	26.9	34.0	50.0	—	6.2	5.4
6. 수출 및 수입 ²⁾							
상품수출, f.o.b.(백만달러)	24	119	4,460	34,714	17.4	43.7	17.1
(수출/GNP, %)	(0.8)	(4.1)	(24.0)	(35.7)	—	—	—
상품수출, c.i.f.(백만달러)	243	404	6,852	31,584	5.2	32.7	12.5
(수입/GNP, %)	(7.2)	(14.0)	(37.0)	(32.5)	—	—	—
제조업/수출(%)	—	51.2	87.5	94.2	—	—	—
7. 투자 및 저축 ²⁾							
투자/GNP(%)	11.9	14.0	31.7	30.2	—	—	—
국내저축률(%)	6.6	8.7	19.9	32.8	—	—	—
해외저축률(%)	5.3	6.9	12.1	-2.5	—	—	—
8. 외채 ²⁾							
총외채(백만 달러)	—	177	8,456	44,510	—	—	—
순외채(백만 달러)	—	50	6,750	—	—	—	—
9. GNP 디플레이터(%, 1980=100)	1.0	7.2	30.7	141.4	21.8	15.6	12.4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註 : 1) 1980년 가격기준 2) 경상가격기준

1. 1960년 이전의 정책

1960년 이전에 한국경제는 종전 직후의 시기에 쉽게 예견될 수 있었던 많은 문제를 지나고 있었다. 경제는 높은 失業, 財政赤字 및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서의 國際收支赤字 등과 같은 巨視經濟의 不均衡을 경험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동안에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0% 이상이었으며 국제수지적자도 평균적으로 GNP의 5~10%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도 주로 물가수준과 국제수지 때문에 발생하였던 경제적인 압력을 緩和하는 데에 기울여졌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로서 명목환율은 고정되었으며, 불충분한 조정만이 허용되었으므로, 주기적인 評價切下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만성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 국제수지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당국은 複數換率

制度, 輸入許可, 특정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입대체의 유인을 상당정도 제공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수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까지는 농업부문에 대규모의 노동력의 풀(pool)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대내지향적 발전도상경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1960년대의 정책개혁

1950년대의 수입대체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대에는 많은 경제적 개혁이 실시되었다.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은 1962년에 실행되었으며 현재는 제6차 계획(1987~91)이 진행중에 있다. 각 계획에서는 基軸產業의 발전, 산업구조의 현대화 및 충분한 社會間接資本의 공급 등과 같은 문제들이 특히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주요한 정책변화는 1964~65년의 기간 동안 외환제도 및 금융부문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5월에 한국의 통화는 1달러에 대해 130원에서 255원으로 평가절하되었으며, 1965년 9월에 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은 연16%에서 연26%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개혁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도입되었던 다른 중요한 정책들은 광범위한 수출진흥 정책의 도입, 수입통제를 점차적으로 자유화하려는 시도, 국내저축부족을 메우기 위한 해외자본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 등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수입통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주로 만성적인 국제수지문제로 말미암아 수출진흥처럼 활발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더구나 1960년대 후반에 와서 부터는 매우 복잡한 산업유인이 농업부문에 주어졌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수반하였던 1960년대초의 정책변화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급속한 수출확대가 달성되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통해서, 나중에는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서 要素賦存이 이동함에 따라 資本 및 技術集約的 생산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GNP에 대한 수출의 비율은 1964년에는 겨우 4.1%였지만, 그 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74년까지는 24.0%, 1986년까지는 35.7%가 되었다. 더구나 1960년대초 이래로 수출의 성장에 있어서 공산품이 지배적인 요인이었다. 공산품의 수출은 1964년에는 총수출의 겨우 51.2%였지만, 1974년에는 87.5%, 1986년에는 94.2%에 달하였으며, GNP상 제조업부문의 몫은 1964년의 9.7%에서 1986년에는 33.3%로 증가하였고 농업의 몫은 같은 기간 동안에 45.9%에서 13.8%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 초반 이래로 노동집약적 생산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고용상황도 크게 개선

되었다. 1963년에 8.2%였던 公式失業率은 1969년에는 5% 미만, 1976년에는 4% 미만으로 까지 감소하였다. 1980년대초의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그 때 이후로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였다.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진흥

수출진흥무역전략에서 십여년(1962~1971)에 걸쳐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에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국내요소 상대가격(wage-rental ratio)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왔고 또 경공업제품의 수입에 대항한 해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증대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생산 및 수출을 보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필연적이라 믿어졌다. 그러한 필요성은 '선진공업국'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강렬한 열망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산업전략의 변화는 사실 정부가 이른바 重化學工業을 진흥시키기 위한 一聯의 特別法을 제정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1973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1973년에 정부는 주로 정부가 후원하는 투자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내에 重化學工業振興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7년동안 이 정책은 활발하게 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하의 공업화 시도는 처음부터 대내적, 대외적으로 많은 장애에 부딪쳤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대외적인 장애요인은 油價上昇, 선진국에서의 산업조정의 지연, 보호무역주의의 증대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요소부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우위가 그리 잘 보장되지 않는 산업에의 '지나치게 급속하고 과다한' 투자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국내저축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축적면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투자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採算性이 떨어지는 일부 산업에서는 超過設備가 발생하였으며, 투자효율이 높은 수출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은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1970년대 후반의 수출둔화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국내의 저축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外債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78년에 168억 달러였던 외채는 1983년에는 401억 달러로까지 증가하여 한국은 세계 제 4위의 외채국이 되었다.

4. 1980년대의 수입자유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

한국경제가 특히 1979년에서 1981년에 걸쳐 침체를 겪게 되자, 한국의 政策當局은 경제적인 下降이 오직 불리한 외부적 여건이나 불안정한 국내정치 때문만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정부주도하의 성장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금융부문의 낙후, 중소기업의 불충분한 발전, 정당화될 수 없는 국내시장의 보호구조 등과 같이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의미하는 많은 징후를 놓았던 것이다. 특히 1970년대에 정부가 장려하였던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는 많은 실패를 낳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투자결정과정은 물론 금융부문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또한 수입통제를 자유화함으로써 보호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 착수하였다. 1983년초에 정부내에 關稅改革委員會가 설치되었으며 폐기지방식의 수입자유화계획이 수립되었다. 1983년에 발표된 정부의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유화율은 1983년의 80.4%에서 1986년에는 91.6%, 1988년에는 95.2%로 증가하게 되어 있었다(表 2)를 참조). 이 계획은 또한 1988년까지의 관세개혁안도 포함하고 있었다. 관세개혁의 주요내용은 상품에 따라 0~100%로 차별화되어 있는 기본관세율을 1988년까지 0~30%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평균적인 기본관세율은 1983년의 23.7%에서 1986년의 19.9%, 그리고 1988년까지는 0~30%의 범위에 걸쳐 평균 18.1%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3년 자유화폐기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과도한 보호를 받았던 상품 및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여 각 수입품목을 단계별로 자

〈表 2〉 1983~1988년의 수입자유화 계획

산업	수입품목 (1983)	수입자유화율(%)			
		1983	1984	1986	1988
1. 1차 및 가공식품	1,386	73.2	75.8	80.1	80.2
2. 화학	2,182	94.4	95.0	97.8	99.6
3. 비금속	802	90.9	92.8	98.8	100.0
4. 기계류	1,414	68.7	77.9	89.5	99.9
5. 전기 및 전자	495	53.6	62.6	86.9	100.0
6. 섬유	1,089	80.4	90.4	96.1	97.9
7. 기타	547	81.2	82.1	86.8	88.3
총계	7,915	80.4	84.8	91.6	95.2

資料：상공부

유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예외로 두었다. 이 부문의 자유화계획은 특히 農業所得支持政策과 관련된 특별연구를 위하여 留保되었다. 1983년의 자유화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5개년계획(1989~93)이 준비 중에 있다.

수입자유화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1980년대에 일련의 정책개혁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1982년에는 주요한 상업은행들이 민영화되었으며, 「정책」 대출에서 모든 이자보조금이 삭제되었다. 또 1986년에는 모든 「特定產業振興法」이 폐지되었으며 보다 일반적인 「공업발전법」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산업지원이 직접적 지원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예컨대 인력훈련이나 연구개발활동 등에 產業中立的(industry-neutral)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융 및 세제지원 같은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1980년대 초반을 통하여 일련의 緊縮的인 금융조치와 원화의 평가절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책개혁들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다시 高度成長에로의 복귀와 아울러 1986년부터는 국제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表 1>을 참조).

IV. 貿易政策의 解剖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력한 수출진흥정책은 1960년대에 도입되어 계속되어 온 반면에 국내시장의 개방에는 특별한 노력없이 1980년대 초까지 왔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농산물가격지지와 특정산업진흥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의 보호구조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유인체계의 결과 실제로 수출이 수입대체보다 선호되었는가의 여부는 先驗的(a priori)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대체에 대해 제공되어진 보호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인구조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수출활동에 대한 유인

1960년대 초반 이후에 도입된 수출유인은 일반적으로 特惠租稅制度, 特惠貸出制度, 그리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제도라는 형태를 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혜조세제도에는 수출재생산을 위한 수입원료,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면제, 중간투입 및 수출판매에 대한 간접세의 면제, 수출활동을 통한 이윤에 대한 직접세 감면,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손실의 지불을 위한 과세소득으로부터 만들어진 準備金, 그리고 수출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본에 대한 加速減價償却(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혜대출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요소구입과 고정투자자금조달을 위한 단기 및 장기신용 지원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관대한 減耗許用이 면세수입원료에 대하여 실제로 수출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도 많이 주어졌다. 또한 수출에 비례해서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하는 輸出入連繫制度가 실행되었으며, 전기나 철도수송 등과 같은 간접투입에 대해서는 우대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유인들 중의 일부는 진정한 보조라 간주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증간투입 및 수출판매에 대한 간접세의 면제라든가 수입투입물에 대한 관세의 면제는 수출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불과하다. 즉, 그들은 세계시장가격으로 요소를 구입하고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輸出誘引體制에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3년초에 수출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유인들 중의 일부는 폐지되었다. 즉, 1973년에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감면은 폐지되었다. 1975년 7월, 수출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투입물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關稅還給制度(drawback system)로 바뀌었다. 전기료할인도 1976년에 폐지되었으며 감모허용도 계속적으로 삭감되어 1970년대 동안 시장율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수출관련대출과 결부된 이자율지원 및 信用의 利用可能性(credit availability) 등이 주요한 수출유인이 되었다. 수출활동에 대한 특혜대출은 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을 갖는 총수출판매가치와 결합된 短期貸出과 수출산업의 고정투자 및 輸出信用(exports on credit)에 대한 장기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수출산업에 대한 특혜대출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예를 들어 국내총여신 중에서 수출산업에 대한 단기 및 장기특혜대출이 차지하는 둑은 1966년의 5.1%에서 1978년에는 20.5%로 증가하였다. 수출산업에 대한 모든 특혜대출의 加重平均利子率은 1966년에는 7.7%, 1978년에는 10.6%였으며, 반면에 상업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은 1966년에는 26.4%, 1978년에는 19.0%였다.⁽⁷⁾ 특혜대출과 일반대출 사이의 이러한 이자율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1982년 6월의 이자율개혁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수출판매와 결부된 단기 및 장기대출의 이용가능성도 1988년까지는 소규모 기업 이외에는 모두 제거되었다.

1960년대 초반 이래로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수출확대의 배후에 놓인 중요한 요인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비공식적 유인, 즉 행정적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고위관료들의 특별한주의, 가령 정부의 문서작업의 신속한 처리나 장래의 정부지원약속 등과 같은 것들도 포함

(7) C.H. Nam, "Trade, Industrial Pol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Korea," in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edited by W. Hong and L.B. Krause, Seoul: KDI Press, 1981, p.193.

된다. 비록 아무도 그러한 비공식적 유인의 가치를 수치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정도는 잘 알려져 있다고 하겠다.

2. 수출판매 및 국내판매의 유인

수입통제수단에 관한 한 한국에서는 법적 관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안 보인다. 많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며 많은 상품들은 禁止的 關稅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다. <表 3>에는 실제로 정수된 관세 및 면제된 관세에 관한 자료와 이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暗默的 關稅率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68~86년 동안에 모든 수입상품에 대한 법적 관세율은 실질관세율을 초과하였다. 법적 관세율은 평균 16.2%인 반면 실제 세율은 6.7%였다. 예상하였던대로 실질관세율의 추이는 법적관세율의 추이와 거의 관계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세율이 한국의 수입대체산업에 주어진 유인의 척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입통제에서는 수입수량제한이 관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의 자유화시도와 더불어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 시스템은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상품은 모두 자동적으로 수입이 인가되는(AA품목) ‘네가티브(negative)’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품목 및 수량은 정부가 수입의 필요성, 국제수지상황 및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 년에 두 번씩 결정하였다. 원료나 비경쟁적 중간재의 수입은 보통 자동적으로 인가되는 반면에 수량제한은 주로 수입경쟁품목이나 非必須財 혹은 사치재에 적용되었다.

1967년 후반에 네가티브 시스템이 채택되었을 때, 1,312개 기본 품목(CCCN4-digit)의 60% 이상이 AA품목으로 되었다(<表 4>를 참조). 그렇지만 그 이후로 기본수입품목에 대한 AA품목의 비율로 측정된 수입자유화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75년에는 49%로 떨어졌다. 정

<表 3> 實效關稅率 : 1968~1986

	1969	1974	1980	1982	1984	1986
A. 관세 정수 및 면제						
1. 관세 정수액(10억 원)	37.2	126.7	766.1	1,012.6	1,594.0	1,942.6
2. 관세 면제액(10억 원)	66.4	302.8	789.5	1,040.9	1,211.3	1,476.0
3. 총법적 관세(A.1+A.2)	104.3	329.5	1,555.6	2,053.5	2,805.3	3,418.6
4. 총수입(백만 달러)	1,462.9	6,581.8	21,598.0	23,474.0	30,631.4	31,583.9
5. 총수입(10억 원)	404.2	2,781.8	13,737.0	17,533.7	25,344.4	27,206.4
B. 관세율						
1. 실제 관세율(A.1÷A.5)	9.4	4.6	5.6	5.8	6.3	7.1
2. 법적 관세율(A.3÷A.5)	25.8	15.4	11.3	11.7	11.1	12.6

資料 : 재무부, 국세청, 『경제통계연보』(1987)

〈表 4〉 한국의 非關稅 輸入制限 : 1967~1988

	자동등록(Automatic)					수입자유화율 (=A/B) (%)
	금지	제한	승인(A)	합계(B)		
1967	118	402	792	1,312		60.4
1969	75	514	723	1,312		55.1
1971	73	518	721	1,312		55.0
1973	73	556	683	1,312		52.1
1975	66	602	644	1,312		49.1
1977	61	560	691	1,312		52.7
1979	—	328	682	1,010		67.5
1981	—	1,911	5,649	7,560		74.7
1983	—	1,482	6,078	7,560		80.3
1985	—	970	6,945	7,915		87.7
1987	—	499	7,412	7,911		93.6
1988	—	358	7,553	7,911		95.4

資料：상공부

註: 1) 수입품목분류는 1980년까지는 4-digit CCCN코드, 1980년 이후는 8-digit CCCN 코드에 의거함.

부가 주로 무역수지의 호조로 말미암아 수입통제를 다시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77년의 일이었다. 또 이러한 자유화시도도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와 그 이후의 국제수지상태의 악화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초에 국제수지가 개선되자마자, 정부는 1983년에 패키지 방식의 수입자유화계획을 도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非關稅障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국내판매에 대하여 주어진 실효보호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비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筆者(1981)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表 5〉에는 1978년도의 국내판매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수출판매에 주어진 實效補助率의推定值가 제시되어 있다. 수출판매에 대한 암묵적 보조는 다른 유인들은 진정한 보조가 아니거나 무시할 수 있는 크기라는 가정하에—수출대출과 일반은행대출 사이의 이자율격차 및 직접세의 減免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국내판매의 실효보호율이 일부는 陽, 일부는 陰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수출에 대한 실효보조율은 산업간에 상당히 균등하였으며 평균은 약 16%였다. 그러므로 수출유인은 최소한 수입대체유인보다는 덜 왜곡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에 따르면 음료, 담배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제조업부문의 경우, 국내판매의 보조율은 3.5%인 반면에 수출판매의 보조율은 15.9%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아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더 큰 유인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表 5〉 수출 및 국내판매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1978년)

(%)

	수출판매에 대한 實效補助率		국내판매에 대한 實效保護率		총판매에 대한 實效誘因率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I. 농업, 임업 및 어업	15.9	15.1	77.1	73.4	72.6	69.1
II. 광업 및 에너지	11.4	10.6	-25.7	-23.8	-23.6	-21.8
1차생산물, 총계	15.3	14.5	61.9	58.7	58.6	55.5
III. 가공식품	31.7	16.7	-29.4	-16.0	-23.0	-12.6
IV. 음료 및 담배	13.2	10.8	28.0	22.8	27.8	22.6
V. 건축재료	19.1	15.1	-15.0	-11.9	-10.5	-8.4
VI-A. 중간생산물 I	23.6	17.1	-37.9	-27.4	-31.4	-22.7
VI-B. 중간생산물 II	26.3	17.6	7.9	5.3	12.0	8.1
VII. 비내구성 소비재	17.3	12.1	31.5	21.9	24.0	16.7
VIII. 내구성 소비재	38.0	23.1	131.2	81.0	83.2	51.2
IX. 기계류	24.4	16.9	47.4	33.2	43.2	30.3
X. 수송설비	26.1	16.9	135.4	73.8	87.2	48.7
공산품 총계	22.8	15.8	5.3	3.7	9.7	6.7
총산업	17.9	13.9	30.6	24.1	27.8	21.9
1차생산 및 가공식품	15.6	14.0	55.5	50.0	52.3	47.1
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공산품	23.6	16.2	2.7	1.9	8.2	5.6
음료, 담배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공산품	22.9	15.9	5.1	3.5	10.0	7.0
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총산업	18.1	14.0	30.8	24.2	27.9	21.9

資料 : Nam (1981), p. 206.

미한다.

그러나 위에서의 수출활동에 대한 실효보조율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수출활동에 대한 이자율 보조가 수출대출과 비특혜 일반은행대출 사이의 이자율격차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특혜 일반은행대출의 이자율도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자유시장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곤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측정된 이자보조는 상당한 정도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새로운 수출산업에서 수출확대는 그 산업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국내시장은 종종 유치산업보호론하에서 수출의 초기단계에 있던 기업들을 위하여 유보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확대는 국내소비자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비공식적 유인의 가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국내시장을 상대로 한 생산에 비교할 때 수출이 갖는 상대적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우리는 1978년에 한국의 무역유인은 일반적으로 수출활동에

치우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 쪽으로 치우친 유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성장률은 1970년대 후반에 상당히 감소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주로 환율을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1970년대 동안 한국은 주요한 무역상대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인플레이션율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1974년에서 1980년 사이에 1달러 당 484원으로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에드워즈[Edwards (1985)]의 추정에 의하면 원화의 실질가치는 거의 30%나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의 국내판매에 대한 보호구조도 1970년대를 통해서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된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 일련의 평가절하와 더불어 수입을 자유화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공식적인 수출보조는 거의 제거되었다.

3. 代替的인 무역루트의 효율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대내지향적 무역정책에서 대외지향적 무역정책으로의 전환이 환率調整을 전제로 하는 철저한 貿易自由化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입장벽의 일괄적인 제거가 수행되지 않은 채 이에 따른 反輸出偏向을 상쇄하는 일련의 수출유인을 도입함으로써 달성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수입장벽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출보조를 확대하는 정책('수출보조' 루트를 통한 대외지향)은 환율조정을 수반하는 수입자유화정책('자유무역' 루트를 통한 대외지향)에 대한 하나의 代案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수출에 대해 1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든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조금과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을 10% 평가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출보조' 루트는 '자유무역' 루트보다 열등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前者가 행정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출보조나 수입통제는 산업 혹은 생산물 사이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종류의 수량제한도 렌트를 추구하는(rent-seeking) 활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능력있는 기업가들은 그들의 정력과 자원을, 私的으로는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낭비인, 렌트추구활동에 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몇 가지 이유에서 '자유무역' 루트보다는 '수출보조' 루트에 의존하여야 야단 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수입자유화는 수입보호로 인해 이익을 얻는 기존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때문에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수입장벽을 축소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원화의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압력의 원천이라 생각되었다. 셋째, 輸入稅는 정부의 주요한 수입원을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수입장벽을 유지한 채 수출보조를 확대함으로써 수출과 수입대체가 모두 더 잘 촉진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좌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초에 한국에서는 ‘수출보조’를 통한 대외지향은 주로 두 가지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하나는 시장금리 이하로 제공되던 특혜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출량때문에 한국의 통화당국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도상국에서의 수출보조금이 점차 선진국, 특히 미국에 의해서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ies)*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상계관세에 의해 보복되던 네 나라의 발전도상국 중 하나가 되었다.⁽⁸⁾ 이러한 이유에서 1980년대초까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수출보조조치들이 제거되었다. 동시에 수입자유화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서는 ‘자유무역’ 루트가 ‘수출보조’ 루트를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대외지향적 전략이 ‘自由貿易’ 루트보다는 ‘輸出補助’ 루트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수입대체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수출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대체로 서로 상쇄되어 많은 발전도상국에서보다는 수입대체와 수출생산사이에 그리 큰 차별이 없거나 혹은 보다 더 중립적인 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한국경제의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무역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수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적절히 구비되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 수송 및 커뮤니케이션,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유지,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의 *去來費用*을 감소시키기 위한 뚜렷한 법적 제도는 效率的인 市場過程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비록 한국정부가 중화학공업진흥 및 금융부문관리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 실수는 하였지만, 계획된 5개년계획의 수행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서비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들과 결합된 무역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도와 급속한 무역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었다. 특히 공산품수출의 급속한 확대는 지

(8) C.H. Nam, “Export-promoting Subsidies, Countervailing Threats,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 No. 4, Sept. 1987을 참조하라.

난 이십여년 동안에 걸친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출보조’ 루트를 통한 대외지향이 한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라는 바람직한 經濟的 轉換을 가져오는 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아무런 경제적 비용도 수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 비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것이었으므로 다른 발전도상국들이 그러한 誘引體制를 盲目的으로 모방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급속한 수출확대는 低金利政策金融의 편리한 이용에 의해서 크게 촉진되었다.⁽⁹⁾ 그러나 그러한 輸出金融制度와 信用割當制度는 한국의 금융부문을 상대적으로 落後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금융부문은 저축자와 투자자사이의 仲介役割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산업이나 투자프로젝트로 자금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렌트추구활동과 한국의 비교우위가 보장되지 않은 자본집약적 투자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종종 信用擴大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금융부문이 가장 발전이 느린 영역으로 머물러 있어 경제성장을 실화시키는 데 중대한 隘路가 되고 있다.

둘째, 과거의 무역정책이 초래한 바람직하지 못한 또 다른 결과는 국내시장의 비효율적인 보호구조이다. 주로 수입수량제한으로 인하여 실효보호율이 여러 산업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配分效率率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높은 보호를 받는 산업은 농업, 일부 화학생산물 및 사치소비재 등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수출보조’ 루트를 통한 대외지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이것은 초기에 수입대체의 보호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수입장벽으로 인한 反輸出偏向은 수출보조에 의해 쉽게 상쇄되었다. 그렇지만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수출보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높은 수입대체의 보호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출보조와 수입장벽은 더욱 더 일부 선진국의 상계조치 및 다른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 루트를 ‘수출보조’ 루트보다 더욱 유리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선진국에 의한 新保護貿易主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발전도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輸出悲觀論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1983년에 발전도상국의 수출은 선진경제에서의 공산품시장 점유율의 격우 2.3%에 불과하였

(9) 사실 Hong(1979)의 추정에 따르면, 1970년대에 금융제도를 통한 모든 대출은 평균적으로 貧의 실질이자율수준에서 확대되었다고 한다.

다.⁽¹⁰⁾ 또한 1960년대의 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최근 발전도상국에서 수출의 GNP성장에 대한 寄與가 줄어들었다는 정후는 보이지 않는다.⁽¹¹⁾ 비록 新保護貿易主義의 위협이 더욱 절박한 현실이 된다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물론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最善의 貿易戰略은 여전히 대외지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Baldwin, R.,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7, No. 3, May/June, 1969.
- Bhagwati, J.,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8.
- Edwards, S., "Trend in Real Exchange Rate Behavior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CPD discussion paper No. 1985-16, The World Bank, April, 1985.
- Havrylyshyn, O., "Penetrating the Fallacy of Export Composition: Or Hobson's 'Second Falsehood' Revisited," a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a mimeo), 1987.
- Hong, W.,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Seoul: KDI Press, 1979.
- Krueger, A.O.,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8.
- Krueger, A.O., "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in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edited by W. Hong and L.B. Krause, Seoul: KDI Press, 1981.
- Krueger, A.O., and Tuncer, B., "An Empirical Tes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2, 1982.
- Little, I.M.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82.
- Little, I.M.D., Scitovsky, T. and Scott, M.F.,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MacBean, A.I. and Nguyen, T., "Export Instability and Growth" (a mimeo), 1987.

(10) World Bank, *op. cit.*, 1987, p.81을 참조하라.

(11) 발전도상국에서 GNP 성장률에 대한 공산품수출의 상대적인 성장률(공산품수출의 성장률/GNP 성장률)은 1965~73년에는 1.8이었던 반면에 1980~86년에는 2.3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World Bank, *op. cit.*, 1987, p.26을 참조하라.

- Nam, C.H., "Trade, Industrial Pol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Korea," in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edited by W. Hong and L.B. Krause, Seoul: KDI Press, 1981.
- Nam, C.H., "Export-promoting Subsidies, Countervailing Threats,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 No. 4, Sept. 1987.
- Prebisch, R., "Five Stages in My Thinking on Development," in *Pioneers in Development*, edited by G.M. Meier and D. Se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Sapsford, D.R., "The Statistical Debate on the Net Barter Terms of Trade between Primary Commodities and Manufactures: A Comment," *Economic Journal*, Vol. 95, 1985.
- Spraos, J., "The Statistical Debate on the Net Terms of Trade between Primary Commodities and Manufactures," *Economic Journal*, Vol. 90, 1980.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